

“한반도 평화 정착 한·미 양국 정부 지원”

김진표 국회의장-펠로시 미 하원의장, 회담 후 공동발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 추진
전문직 비자쿼터·입양 시민권 입법 논의
김치의 날 지정, 베트남전 참전 한인 논의
금 의장 “펠로시 방한, 한미관계 이정표”
펠로시 “안보·경제·거버넌스 한미관계 탄탄”

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4일 북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양국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결의안 채택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과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미 의장 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양측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한미 동맹이 군사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데 주목하면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 차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가졌다”며 “양측은 내년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기대를 담아,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

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장은 “우리측은 미 의회가, 작년 말 ‘인프라법’에 이어, 지난 달에는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을 통과시킨 점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미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인적자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입법화 방안, 그리고 한인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 또 김치의 날을 지정하는 김치 결의안, 베트남전 참전 미주 한인에 대한 또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펠로시 의장 방한에 대해서 “현재 미국 하원의장으로서 20년 만의 공식 방한이라며 “저 개인적으로도 의장 취임 이후, 헬멧국의 의회 지도자를 의국의 첫 국회의장으로 맞이하게 되어 더욱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고 환영했다.
이어 “시기적으로도 우리 신정부 출범 직후에, 미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장이 연달아 방문한 것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상징적이고 중요한 이정표가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현재 미 의회에는 지한과 의원들이 대거 임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코리아코러스, 코리아스타디움, 의회교포포럼 등 다양한 협력의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며 “이번 협의를 계기로 양국 의회 간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 의회 대표단 순방의 세가지 중요한 목적은 안보, 경제, 거버넌스인데, 이 세가지 분야 모두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탄탄한 관

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서로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다. 시급한 상황에서 안보 상 위기로 시작된 이 관계가 정말로 따뜻한 우호관계로 발전했다”고 호응했다.
이어 “(김 의장과) 경제, 안보, 거버넌스에 대한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월 (한미)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PEPF)에 대한 논의도 했다”며 “우리는 함께 협력을 통해 내가 말한 이 모든 목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그

리고 동시에 한국의 의견을 경청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전했다.
펠로시 의장은 “거버넌스는 여러가지 의미를 지닌다. 공동의 가치와 코로나 19 팬데믹을 이기는 것도 들어가고, 지구 구하는 것 등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고 기회도 많다”며 “이제 우리들의 논의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여러가지 국가 정상 간 논의 뿐만 아니라 의회 간 협력을 통해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스

“펠로시 의전참사” 민주,尹 맹공 나서

오영환 대변인 “아마추어 외교가 빛은 부끄러운 참사”

‘당권 도전’ 박용진 의원
“외치는 불통, 내치는 불안”

더불어민주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한에도 윤석열 정부가의 의전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의전참사’라며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결례가 의전 참사로 이어지며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지만, 공황에 한국 측 의전 관계자가 아무도 안 나가 매우 불쾌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외교에서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아마추어 외교가 빛은 부끄러운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다각적인 외교적 판단으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 여부에 대해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을 번복했다”며 “윤 대통령은 허둥지둥하면서 오후에 펠로시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지만 의전 참사를 뒷북 대응으로 덮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보았다.

차기 당권에 도전 중인 박용진 후보도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말해놓고 미국의 의전 서열 3위 하원의장이 내한하는데 한국 측에선 의전을 아무도 보내지 않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외치는 불통이고 내치는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원의장이 도착한 시간에 영국 보고 뒤늦게하는 사진을 올린 그 순간이 불통 외교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오후에 전화 통화할 게 아니라 면담이라도 만나야 차관보급 성 김은 만나고, 하원의장은 외면하는 이런 아마추어리즘 불통 외교에 국민들은 안보 불안을 느낀다”라고도 했다. /뉴스

도, 막바지 기재부 예산심의 총력전

조봉업 행정부지사, 기재부 예산 핵심인사 잇따라 방문
미래 동력사업 예산 반영 요청



기획재정부를 찾은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사진 오른쪽)가 김완섭 예산실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새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등 위기상황에서 내년도 전북도의 분야별 핵심사업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위한 기재부 예산심사는 2차 심의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3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앞으로 남은 2주 정도를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의 마지막 기회로 판단하고 지휘부를 중심으로 총력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국립 나리꽃 무궁화연구소 설립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산업분야 사업과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재경관과 국장급 면담에서는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순산항 제2순설도 투기장 건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등 대형 핵심사업 3건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내년도 착수를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전북도는 긴박하게 진행되는 기재부의 심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심의 진행상황에 따른 전략적 대응과 지속적인 대면 설득,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8일에는 김관영 도지사의 기재부 핵심인사 면담이 있으며, 각 실국장들 또한 정부인비 확정되는 8월 중순까지 매주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 항우 인사 및 지역 국회의원실과의 공조를 통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한다. /김경수 기자

“재난전문가 키워라”... 군산대 등 대학 9곳에 27억 지원

정부가 전국 9개 대학교에 총 27억원을 지원해 재난 분야 전문가를 양성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개 대학과 재난관리 및 지진방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난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난관리 분야는 2014년, 지진방

재 분야는 2017년부터 각각 추진해왔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대학은 강원대, 동의대, 충북대, 한성대, 숭실대, 경북대, 군산대, 세종대, 울산과학기술원이다. 이 가운데 동의대와 한성대, 경북대 3곳은 새롭게 추가됐다.
행안부는 이들 대학에 2년간 각 3억 원씩 총 27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첫 해 사업 평가는 거쳐 2년째 사업

비는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재난관리 및 지진방재 분야 교과목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산학협력 활동과 장학금 지급 등에 활용한다.
행안부는 참여 대학들이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도록 사업 참여 1회 제한 등의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

‘만 5세 초교입학? 안될말’

민주·정의·시대전환 의원들-시민단체尹 정부 학제 개편안 관련 “즉각 철회” 주장

범야권 의원 47명과 만5세초등 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연대)는 4일 윤석열 정부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겨냥해 “발버둥기, 옛날자, 실언은 학부모들과 국민을 화나게 하고 정부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정의당·시대전환 소속 의원들과 연대측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폐식 축출행정으로 국민적 대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기를 일 계획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만 5세 입학제는 정권의 무능·오만·불통이 종합된 국민폐식 정책”이라며 “나라의 100년 좌우할 교육정책을 속의과정과 교육적 효과 분석도 없이 강행한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한미비도 0점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대가 진행하는 반대 서명이 어제(3일) 기준 20만명이 넘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익원 과 초중교 교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98% 이상이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고 들었다”며 “반대 여론이 이토록 높은 것을 알고도 강행했다면 오만하고 자만하고 몰락하면 무능한 것”이라고 했다.

연대 측 조영숙 한국영유아교원 교육학회 회장은 “이 정책이 추진되었을 때 교육현장에서는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교육환경으로 인해 아이들이 받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다숨 교사노조연맹 산하 전국국공립교사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교육주체는 물론 국민 전체를 완전 배제시켰다”며 “누구도 소통이 없었다. 완벽한 ‘국민 폐식’이라고 짚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차관은 교육 경력도 전혀 없는 국무조정실 출신이고 차관보에 내정됐다는 사람도 행정안전부에서 진뻐가 굶은 사람”이라며 “교육부 장관, 차관 차관보가 교육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구성돼있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ს교육감은 영상 속사를 통해 “저를 비롯한 17개 시도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은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취향연령향학제개편안에 대해 알게 됐다”며 “학교 현장과의 연결고리인 교육감들과도 협의하지 않았다면 대체 누구의 상의에 이런 개편안 내놨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물었다.

이들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추진 즉각 철회 △2018~2022년생 학부모들에게 정부가 직접 사과할 것 △학생·학부모·교직원 포함 교육주체와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학교 현장과의 연결고리인 교육감들과도 협의하지 않았다면 대체 누구의 상의에 이런 개편안 내놨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물었다.
이율러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깊은 논의를 거쳐 학제개편안에 대해 다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